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12호

발행일: 2023. 12. 18. (월)

제410회 국회(정기회, 2023. 9. 1. ~ 2023.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산업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
- 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 다. 선도적 해양산업 육성
- 라. 건강보험제도 개편
- 마. 재난안전 관리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10회 국회(정기회)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12월 8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모두 137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개최자 없는 대규모 지역 축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9일에 개최된 제41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등 4건의 법률안은 12월 1일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이번 정기회에 재부의 되었으나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제410회 국회의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37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정무위원회(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정무위원장
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6	기획재정위원회(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	교육위원회(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0인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류성걸 의원 등 10인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장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1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교육위원장
12	외교통일위원회(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장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1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1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6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정부
1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8	국방위원회(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9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2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3	행정안전위원회(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5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9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등 13인
3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등 13인
3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우택 의원 등 28인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 의원 등 10인
34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0인
35		119 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오영환 의원 등 34인
36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0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5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4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7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이양수 의원 등 11인	
48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5인	
4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6인	
5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등 13인	
5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1인	
5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의원 등 13인	
5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2인	
5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의원 등 12인	
5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2)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5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6	보건복지위원회(3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등 10인
6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1인
6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의원 등 11인
6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의원 등 13인
7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8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8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8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8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5	환경노동위원회(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
8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6인
8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 의원 등 12인
8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12인
9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의원 등 11인
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1인
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등 11인
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 등 10인
9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 의원 등 13인
9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9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9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 등 11인
9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등 10인
9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등 11인
1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1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0인
10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10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4	국토교통위원회(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등 11인
1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등 12인
10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3인
10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등 18인
1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의원 등 10인
12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 의원 등 10인
12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등 11인
12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등 11인
1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의원 등 17인
12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등 12인
1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 의원 등 10인
1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 등 19인
12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4인
1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의원 등 13인
1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1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13인
1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등 12인
13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등 11인
1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2인
1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등 20인
13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등 12인
13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의원 등 12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산업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선도적 해양산업 육성, 건강보험제도 개편, 재난안전 관리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산업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

개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사업에 관한 수출규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 우리 제조업의 주력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을 위협하는 국제적 악재들이 해를 거듭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R&D분야 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그린 전환, 모빌리티 혁신 등을 통해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지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미래자동차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이 행해졌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1호 산업경쟁력 강화 이슈](#), [제2023-7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이슈](#) 등 참조).

※ 미래자동차: 친환경자동차·미래자동차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p> <p>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과 부가가치도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배터리·소프트웨어·반도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역시 미래자동차로 전환되고 있음.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국중심주의 강화 등 국제정세도 불안정해지면서 공급망 불안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대응이 필요하지만, 부품산업계의 기술 역량과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대응 능력은 취약한 상황에 있음.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활성화할</p>	2023-12-08 (원안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p>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환경 조성과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함. 특히, 미래자동차산업이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품산업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부처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활용, 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도 커지고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p>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과제목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주요 내용

(산업공급망 강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 구축('소부장특별법' 개정)

* 산업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EWS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

-수출통제(대외무역법),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외투 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투유치 확대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가칭)디지털 통상 로드맵(’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한-싱 DPA 정식서명, DEPA 가입협상 타결, IPEF/CPTPP 디지털 협상에 우리이익 반영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 확대

(다자·양자 통상)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新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지속 대응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PA(태평양동맹) 가입 및 한-멕시코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GCC 협상 진전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IPEF 참여 긍정검토, CPTPP 가입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新 통상질서 주도

(무역구조 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

입 지원*을 강화

- *중소·중견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험공급 규모 확대 및 현지물류지원 강화
- 동남아 등 新시장 진출 확대, 脫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자·첨단 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7. 12.)

[주력산업 고도화]

- (전략 방향) 그린·디지털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 추진
 - (그린·디지털 전환) 수소환원제철 등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및 AI·제조로봇 활용을 통한 제조 생산성 혁신 지원*
 -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7.5)→선도사업 선정,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
 - (사업재편) 기업활력법 개정* 등을 통한 선제적 사업전환 지원
 - * 비상 사업재편 지원가능 범위(업종 등)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 (인력 전환) 디지털기술 교육 등 재직자 역량 강화
- (업종별 전략)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전환 집중 추진

구분	주요내용
자동차	위협 부품·소재 수직계열화(예 : Tesla), 내연기관 중심 부품생태계
	전략 배터리·반도체·SW 등 전략적 협력,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1,200개)
조선	위협 스마트·친환경선박 기술경쟁 심화 및 조선업 인력부족 가속화
	전략 자율운항·무탄소艙 개발, 생산인력 양성 및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12. 27.)

□ 주력산업 :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한 新주력산업으로의 재도약

- 자동차** **전동화 + 자율주행 → SDV 중점투자 및 부품기업 전환**
 - * SDV : Software-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 자동차 SW 플랫폼과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자동차-SW 융합인력 1만명 압축 육성(~'30년)
 - 내연차 부품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가칭)‘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특별법’을 제정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 2.

[\(2023\) 충남 미래자동차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미래자동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21-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부품산업 혁신성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19 2020. 12. 30.

본 과제에서는 전기동력화 및 자율주행화 등 미래자동차 시대로의 변화가 가져올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 지원 사업\(4\)-모빌리티 전환 국가 전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MP-22-05 2022. 5. 14.

이번에 발행하는 단행본 『모빌리티 대전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은 성공적인 모빌리티 대전환에 필요한 이슈들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빌리티 개념,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 및 사회적 영향과 수용성 등 다양한 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전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며, 모빌리티 대전환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개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로 삼고,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쳤습니다. 주택시장에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수요를 관리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정비사업 관련 제도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입법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대거 통과되었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1-5호 주택 정책](#) 이슈 참조).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재건축초과이익 금액을 3천만 원에서 8천

만 원으로 올려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토교통위원회	<p><u>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2006년 현행법 제정 이후 부과기준 등이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동안 집값 상승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p>	2023-12-08 (원안가결)
2	국토교통위원회	<p><u>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주택의 감소로 사업성이 저하됨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부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공급이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아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었음. 이에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p>	2023-12-08 (원안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과제목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주요 내용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 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조사 등 실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2] 주거 안정

◇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공급)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 수립
-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을 마련('22.3/4)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12. 27.)

- (정비사업) 노후 주택·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제도개선 추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조속 입법 추진
 -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여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
 - *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동시 수립 허용

조합 방식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구역지정, 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저분 계획	착공분양	입주
신탁 방식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신탁사 특례 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	관리저분 계획	착공분양	입주	

-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¹⁾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²⁾
 - 1) (現) 별도 규정 無 → (改) 사업 무관 기부채납 금지, 기부채납 인정범위 명확화 등
 - 2)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인센티브 제공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검토 등
-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국토부·LH 합동)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小菜건축 연결구역 통합, 재해취약지역 사업유도 등 소규모정비법령 및 빈집 업무 지침 개정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국토교통부, 2022. 7. 18.)

①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 ① 새 정부 250만호+ α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8월 둘째주)
 - 주택공급혁신위(5.29-)를 통해 주택공급 계획 마련 중
 -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 제시
 - 주체: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전환
 - *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에도 부여(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 입지: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집중 공급
 - 속도: 통합심의* 확대, 인허가 합리화로 속도·효율성 제고
 - *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통합 →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 품질: 층간소음, 주차불편 등을 해소하여 주택품질 제고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정부 업무보고(국토교통부, 2023. 1. 3.)

② 주택공급 기반 확충

-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8만호 지정 추진
 - * 안전진단기준 개정(23.1), 재초환법 개정(23.1), 통합심의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23.1)
- (도심복합)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23.1, 도심복합법 제정)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 발굴·선정 지원
 - 공공시행 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신규 후보지 발굴 및 기존 후보지 지구지정(1만호) 추진
 - * 기 지구 지정된 9곳 1.5만호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등 사업계획 승인 절차 착수
- (소규모 정비) 사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 소규모재개발 현금청산규정 완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확대(50→75%) 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현진 의원안: 재건축부담금 감경 등](#) 2022. 9.

[유경준 의원안 등: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등](#) 2023.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3. 2.

천준호 의원안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6. 13.

2006년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 등은 주요한 쟁점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택공급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2-06 2022. 10. 31.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법령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이를 위해 주택공급 관련 법령뿐 아니라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공식적·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주택공급 관련 법 체계의 일관성, 법령-정책 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음.

이때 저출산·고령화 가구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 변화된 사회구조적 측면 역시 고려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변화된 미래 사회에 대응 가능한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주택공급 법체계의 체계 정합성과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정책의 목적 달성을 통해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다. 선도적 해양산업 육성

개요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선박에 정보통신(ICT), 센서, 스마트기술 등을 융합해 시스템이 선박을 제어하고 사람의 간섭 없이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선박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거대자료(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해운 분야의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입니다. 자율운항선박은 앞으로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신산업입니다.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항만과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이바지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16년 66조 원 규모에서 점차 증가해 2021년에는 95조 원, 2025년에는 180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도 이에 발맞추어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을 위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u>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u>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 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023-12-08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과제목표

선박·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주요 내용

-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 제공
-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 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제주 신항만은 관광허브로 육성
- 수리조선, 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 제주 신항만은 여객 전용으로 개발,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
- (미래선박 시장 주도) '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최대 30% 지원
- (해상교통망 구축)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 교통로를 지정하고, '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 제공('24년), 디지털 항해·통신 장비 고도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 선점 지원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 **(유망 신산업 육성)**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차세대 AI,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 조성
 - * (AI)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22.6월~), 재난안전·환경분야 AI 선도과제 추진('22.5월) (AI 반도체)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NPU Farm) 구축 및 실증('25년) (데이터)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제1차 기본계획 수립(~'22.12월)
 -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지능형바이오) 빅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 구축(~'25년) (자율차) 핵심 첨단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27년) (물류)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22.10월),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26년)
 -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22년말~'23년)
 - 정책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 * (정책금융)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대상 정책금융 투자 (해외진출)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해외진출 활성화 등
 -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
 - *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2.7),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가동 등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년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해양수산부, 2022. 8. 11.)

① 유망신산업 **인프라 투자 + R&D 지원 → 연매출 15조원 시장 창출**

- 마리나 거점 확대,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23, 마스터플랜)
 - 낚시·물놀이·용품산업이 결합된 낚시복합타운 건립(3개소)
-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 국산화(30→50%) 지원,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전자해도, 바다 Navi. 등),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기술 고도화, 선박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 등 해상교통산업 육성
 - * 고망간강 소재 국제표준, 평형수 처리장치 부품 국산화, 선체 부착생물 제거 장비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정부 업무보고(해양수산부, 2023. 1. 4.)

3.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해상물류 4.0 시대, 스마트·친환경 기술 경쟁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여, 해양모빌리티산업 글로벌 시장(30년 741조원 전망) 선점**

①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

-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5, 587억원) 및 실증센터 구축(23, 울산)
- 저탄소(암모니아, LNG)·무탄소(수소)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개발
 - * 암모니아 LNG하이브리드 등(22~31, 2,540억원)
- ●초정밀 위성항법기술 개발 및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구축

② 디지털 친환경 기술·소재·부품·장비의 국제표준 확보

-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구(IMO) 기술협력 및 개도국 ODA 강화
 - * 미래연료 프로젝트, 디지털 해상교통관리 및 항로표지 시스템 구축 등
- 기술개발 → “국제표준화” → 상용화 →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 * 해양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반영 필요

③ 해양모빌리티 신기술 조기 상용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인·허가 특례, ●인증 간소화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 촉진
 - * ●신기술 선박 시험운항시 특례적용으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면제
 - 설비인증시 정부의 4단계 절차를 민간의 1단계로 간소화(상용화 기간 1년 단축)
- 친환경 선박 건조·이용(선주·화주)을 위한 보조금(선가의 10~30%) 및 금융 혜택(최대 3.4% 금리 우대) 지원으로 시장 창출(~30, 528억 원환)

'23년 중점과제

- ▶ [정책] “국제해운 탈탄소화 대응전략” 수립(23.2)
- ▶ [행사] “국제해사기구 공동 한국해사주간” 개최(23.6)
 - *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선언문(장관급)” 채택
- ▶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 (23.8)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 2.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 간담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자율운항선박 개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해양 신산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K-조선, 세계 1위 지킨다...5년간 7100억원 집중 투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0. 12. 23.

이 글은 친환경·스마트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입법과 정책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 5가지 주제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과제를 제시한다.

[자율운항선박의 기술동향과 법정책 이슈](#)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2-21-15 2022. 11. 30.

□ 자율운항선박은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로 미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부분 자율운항과 완전자율운항선박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음. 2016년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약 56.75억 달러에서 연평균 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1년 세계시장 규모는 95조로, 2025년에는 약 155억 달러 규모로 성장, 2028년에는 33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자율운항 선박은 자율주행자동차처럼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기상 상황과 주변 선박, 암초 같은 해상 장애물과 위협을 파악해 운항하는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IMO)는 자동화 시스템 단계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을 구분함

□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함께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자율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발전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국가별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차이가 있고 기술적·제도적 국제적 표준 기준도 아직 미흡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산업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이에 국내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동향, 법정책적 동향을 살펴본 후, 자율운항선박의 법적 이슈를 통해 자율운항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안연구 2018-07 2018. 8. 31.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산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해운·항만·조선 분야를 포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건강보험제도 개편

개요

사회보험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서는 재정 관리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득 중심으

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p>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재 외국인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현행법상 외국인들이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요건을 요구하되, 실제 상대적으로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의료급여법」 제3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포함)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구성되는 현지조사반에 공단 및 심평원 전문인력이 파견되어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지조사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참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지조사반의 공단 및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실무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다툼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보고·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되,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 및 심평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지조사 관련 법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p>	2023-12-08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과제목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
의 지속가능성 제고

주요 내용

-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 강화
-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2.下)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
 -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③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23.10)하고 국민연금 운용성과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책임성 제고¹⁾, 거버넌스 개선(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²⁾ 검토
- 1)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기능 강화, 성과급 체계 개편 등
- 2) (출산)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6개월 가입기간 인정
-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반영
 - *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 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 추진
- **(고용·산재보험)**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근로복지공단) 마련

출처: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년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2. 8. 19.)

㉓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 (지출개혁)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既,급여항목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도용 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 고가약 등 확대
* 필수고가약의 신속 등재 및 확대 추진 (졸겐스마(19.8억원), 김리아(3.6억원) 등 既 등재 완료)
- (재정관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22.9~)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3. 1. 9.)

3.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 중점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1)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 효율화)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건보지속가능성 제고대책', '23.1)

①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보장성 강화 항목 계획 재점검, 약품비·요양병원 관리
②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외국인 등 건보 가입자격 정비, 보험료 부과 징수 내실화
③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④ 불법행위 엄단·비급여 관리	건보재정 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비급여 실손보험 관리

- (구조 개혁)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 마련 ('건강보험종합계획', '23.하)
 - (보상) 자원투입 수준에 따른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 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혁신 신약·원가미달 필수약품 보상강화
* 주기적인 분석 통해 탄력적·합리적으로 수가 지속 조정
 - (재정통제) 차년도 재정계획·결산 국회 보고, 재정정보 대국민 공시 활성화 등 외부 통제·투명성 제고 장치 마련
 - (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 형평성 확대
 - (접근성) 생존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의 고가치료제 등 제기간 단축 (210→150일), 혁신적 의료기술 신속진입 (한시 수가+재평가 시범사업)
- (의료질·비용 관리)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 의료질·재정건전성 확보 가능도록 혁신적 지불제도 도입 및 비급여 관리
 - (지불제도) 의료질 향상과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사후 보상 ▲성파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 시도 ('23)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및 장애인 구강진료 등 추가 적용 분야 발굴
 - (비급여) 비급여 목록 정비, 실손보험 관리 강화(금융위 협업) 통해 비급여로 인한 의료시장 왜곡 및 진료비 과다발생 방지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언석 의원안 등: [외국인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제도 개선 등](#) 2021. 4.

[주호영 의원안: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요건 강화 등](#) 2022. 4.

[김미애 의원안: 현지조사에 대한 공단·심평원의 업무지원 규정](#) 2023. 9.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4. 20.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련의 정책변화로 건보 재정이 확충되고, 역선택(逆選擇) 등의 문제와 의료 사각지대 발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 강화로 인해 외국인(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성은 높아지고 수용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이에 현행 제도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차별적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마. 재난안전 관리 강화

개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를 맞이하여 거리로 몰려나온 수만 명의 인파들로 인해 158명이 압사하는(11. 24. 현재 기준)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 조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로 재난예방 활동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참사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축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2호 안심사회 구현](#) 이슈 및 [제2022-8호 재난안전 관리](#)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개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매뉴얼 정기점검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023-12-08 (원안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p>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징후 발견 시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응급조치 실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을 기상청장이 직접 예보·경보·통지 및 문자·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다종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주체를 현행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목적의 정보제공 요청은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한 경우에 한정함.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p>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과제목표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제고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2022년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행정안전부, 2022. 7. 26.)

- **[선제적 안전관리] 국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안전대전환 추진**
 - (국민제감) 안전신고와 안전캠페인을 국민참여 기반으로 강화하고, 이를 안전대진단 기간(8~10월) 중 취약지역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통합
 - * 건설현장 2,000여개, 산사태위험지역 2,200여개, 전통시장 580여개 등 24,000여개소
 - (점검내실화) 기관별 분산 실시 → 전국 동시 실시(8~10월), 확인점검 강화(민관합동)
 - (실전역량) 위급상황시 현장 대응능력 및 실전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교육·복제* 등 개선
 - * 현장 활동성을 고려하여 민방위 복제 개편 추진('22.8월 읍지연습 시범적용)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3. 1. 27.)

1.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 ✓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협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설정
- ✓ 재난안전관리 체계 패러다임을 대전환(관점, 방식, 행동)하고, 5대 추진전략*과 65개 세부과제를 추진
 - * ① 새로운 위협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③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④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난피해 지원 강화, ⑤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 새로운 위협을 예측하고 상시적으로 대비
 - (신종재난 발굴) ^{가정}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고, 연구원·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위험요소 상시 발굴·평가 및 관리
 - ※ 부처별·지역별 위험분석 결과를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환경변화 대비) 기후변화에 대비한 침수방지대책*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위협에 대비한 핵심기능 다중화 등 추진
 - * 침수방지사설 법적 실행력 제고(별칙 마련),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지원 등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상시 상황관리) 시·도 외에 시·군·구의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위험상황 인지·보고 등 초기 상황관리 강화
 - (현행) 228개 시군구 중 49개 상황실 운영 → (개선) 호 시군구 상황실 운영
 - 지능형 CCTV 확충('27년 구축완료), CCTV 영상정보 활용 강화(가관간 연계)
 - (협력·역량 강화) 지자체·경찰·소방 협력체계 강화*, 시·도 단위 이원화된 자치경찰 도입, 자치단체장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및 재난안전교육 필수 이수,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 * 자치단체 중심 통합적 대응, 평시 경찰·소방의 지역 안전관리 참여 및 역할 확대 등
 - (훈련·매뉴얼 개선) 신종·복합재난 대응 강화 국가훈련 체계 개선*, 주요 이슈별 중점훈련*, 매뉴얼 디지털화·원페이지화를 통한 활용 강화
 - * 훈련모델 개발, 평가 개선, 합동훈련 중점 등 / ** KTX 터널사고, 풍수해 침수사고 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안: 제안이유 등 2023. 3.

임오경 의원안 등: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축제로서 주최자가 없는 경우의 안전관리 등 2022. 11.

최기상 의원안: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의 응급조치 의무화 등 2023. 3.

- [최기상 의원안: 일정 규모의 호우·태풍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3. 2.
[박성민 의원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2023. 2.
[정부 제출안: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제도 및 안전진단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 2023. 3.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2. 12. 20.

- 지난 10.29 참사를 통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이 노출됨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지역축제 규정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적용 대상으로 함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이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안전 관리 주체들의 능동적·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조됨
 -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책무에 입각한 각 안전관리 주체들의 능동적 직무수행이 요구됨
- 향후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방지책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초자치단체와 112·119 상황실 CCTV 연계를 통해 현장 대응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경찰의 능동적·예방적 사무 원칙을 확립하고 재난·안전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체크리스트 방식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다중운집이 예상될 경우, 보행자 동선확보, 차없는 거리 시행 등과 같은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12. 12.

최근 자연재난 뿐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재난방송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접근성 제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추진 과제 중 재난전문채널 신설, 재난방송 평가,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화·일상화·복잡화된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